

제16차 여성정책포럼

여성공직자의 성공하는 리더십

◎ 일시: 2003년 6월 17일 (화) 14:30-17:00

◎ 장소: 한국여성개발원 본관 2층 국제회의장

초대의 글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개발원에서는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을 모시고 “여성공직자의 성공하는 리더십”을 주제로 제16차 여성정책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참여정부는 공공부문의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참여가 부족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관리직 여성비율을 현 5%에서 2006년까지 10%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여성관리자 특별 임용관리 및 공공부문의 여성채용목표제를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공직사회에서 여성들이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좋은 의견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2003년 6월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장하진

일

정

2:30 - 3:00	등록
3:00 - 3:10	인사말 장하진(한국여성개발원 원장)
3:10 - 4:00	특강 김명자(서울대학교기술정책대학원 교수) (전 환경부 장관)
4:00 - 5:00	질의응답
5:00 -	폐회

목

차

1.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과 그린 리더십
2. 강연자료 2
3. 이대 행정학과 인터뷰자료
4. 3대강 특별법 제정에 얽힌 묻혀 버릴 수도 있는 이야기

21

2003. 6. 17

CEO

金明子

A view of the fu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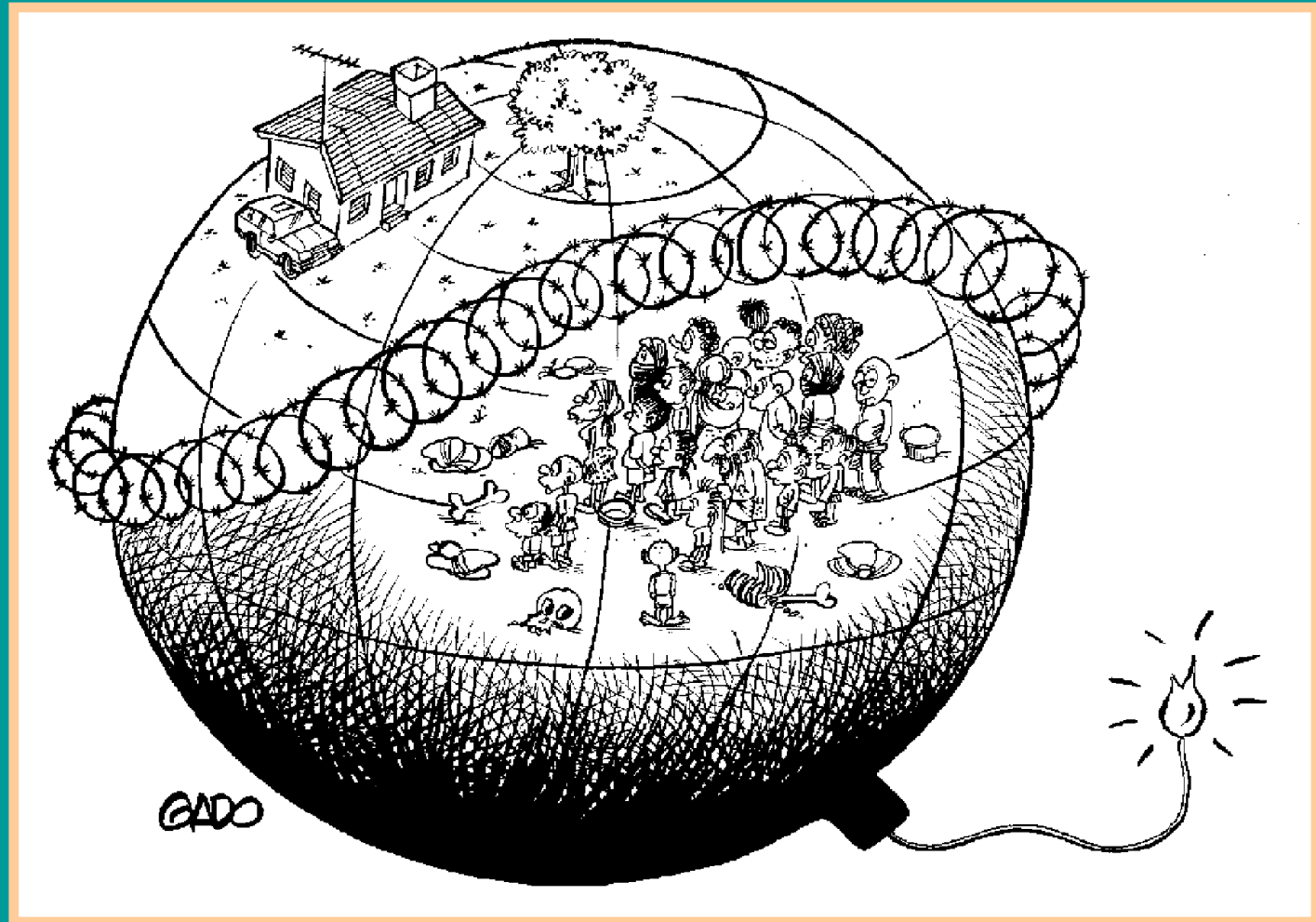
A market sell out?

A view of the fu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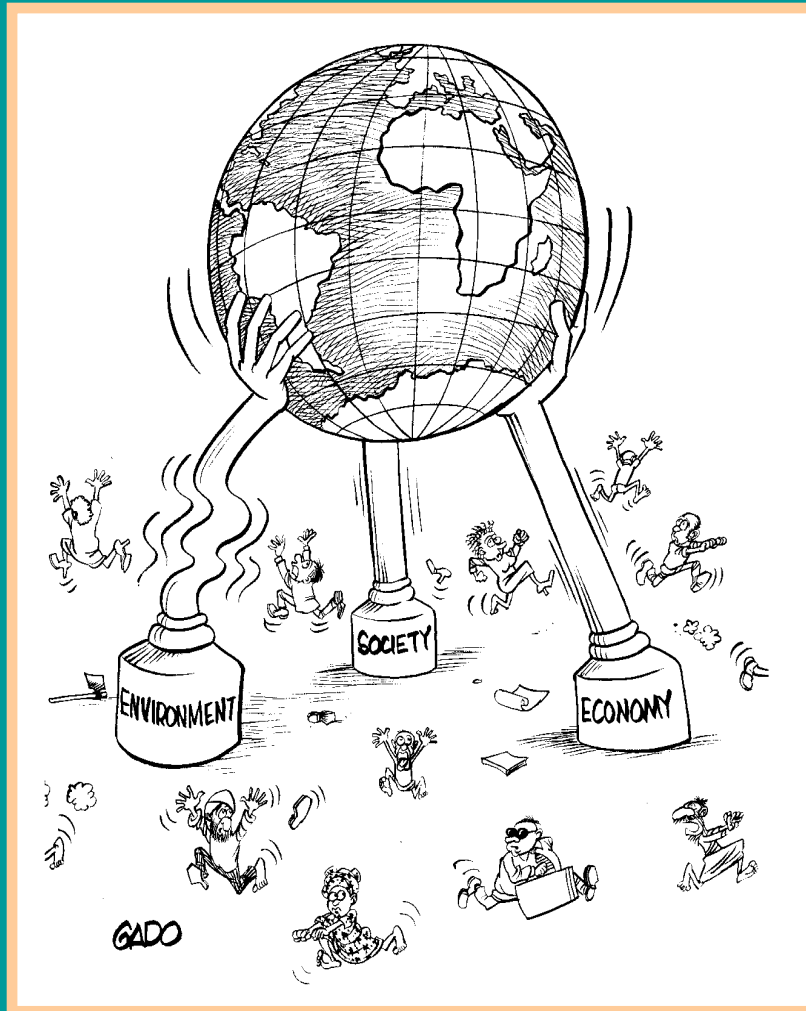
. . . A policy dominated world

A view of the fu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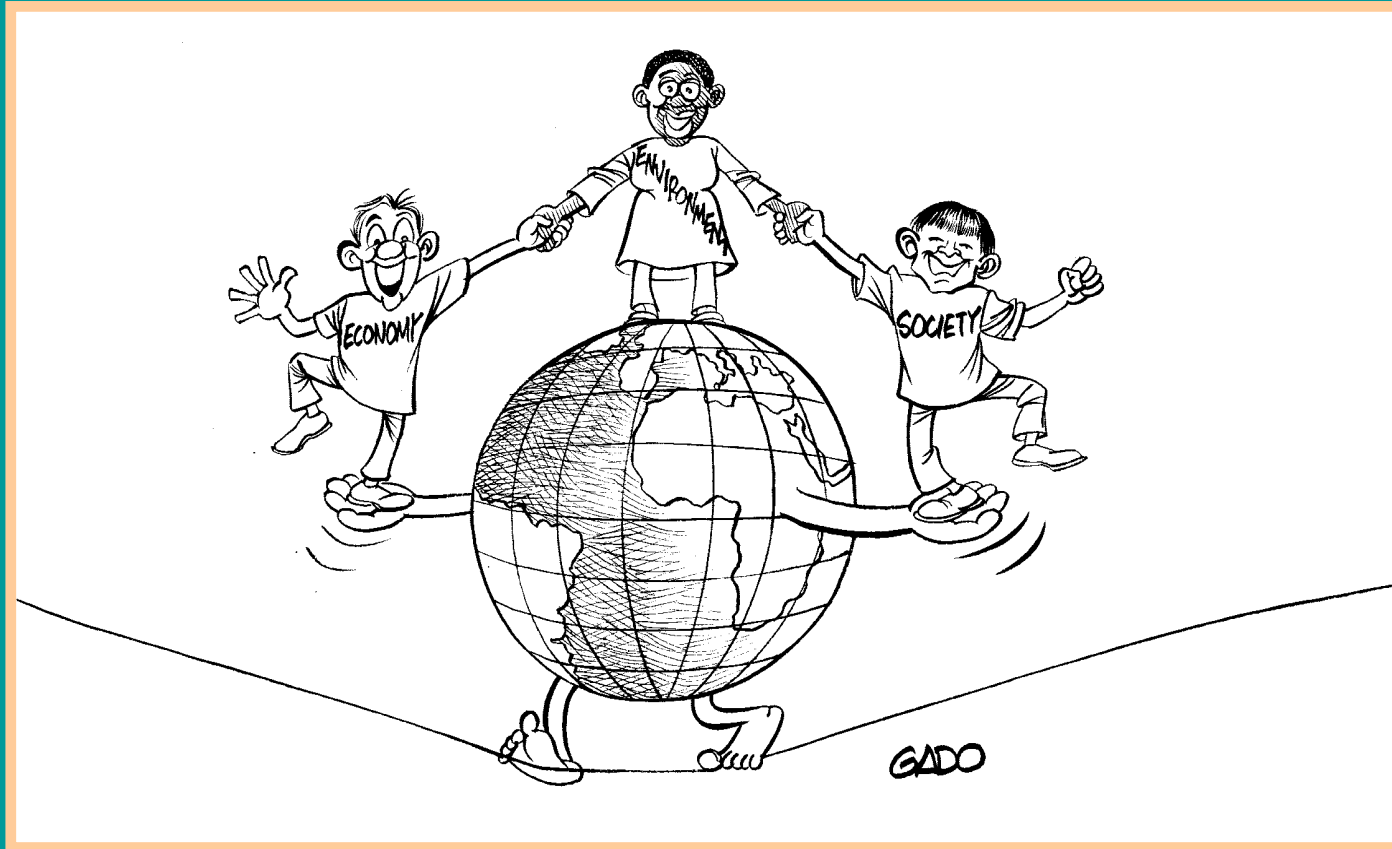
. . . Security in a divided world?

A view of the pres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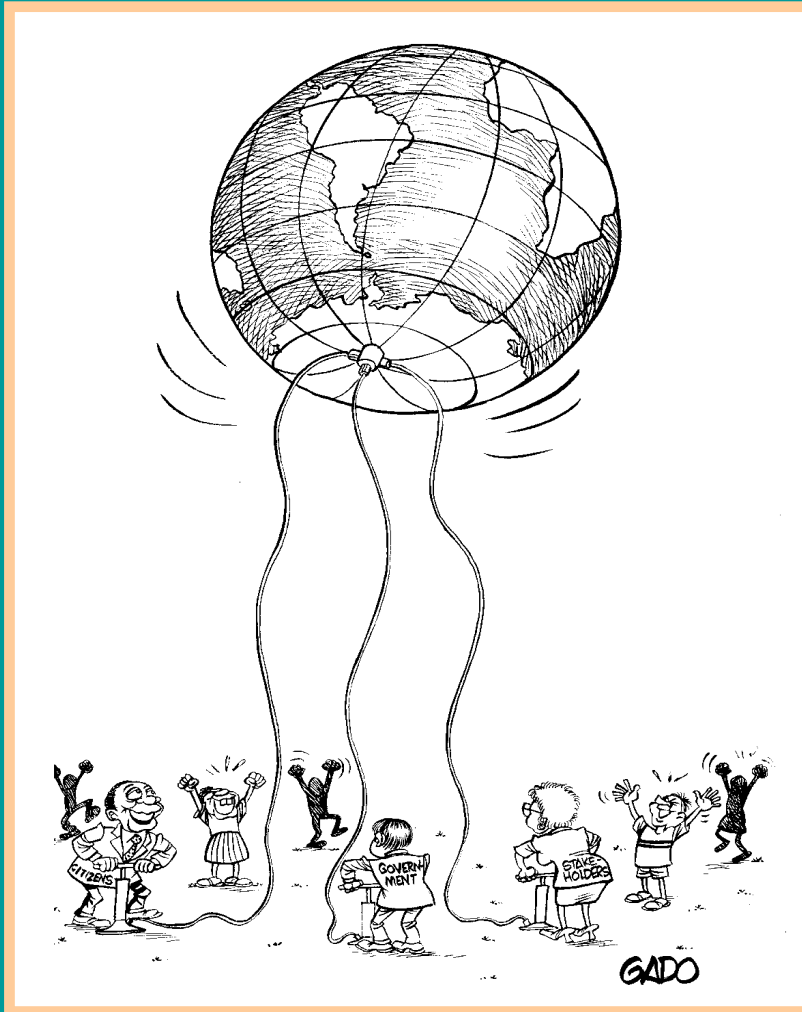
World at risk -
the weak pillar
of sustainable
development

A view of sustainability!



World on track - a balanced trio!

A view of the future?



Together we
can sustain the
earth!

21

:





-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가 ‘engine of growth’
 - knowledge-based society



:

- -
 -
 -
 -

,





(Max Weber)

가



:

(

,

,

)



:

(

)



•

:

,

(

)



가



衆愚



衆愚

가



가 (governance)

▣ 가 가 權威

(government)

가

가

對話

參與



- 가



가(Developmental State)



,



21

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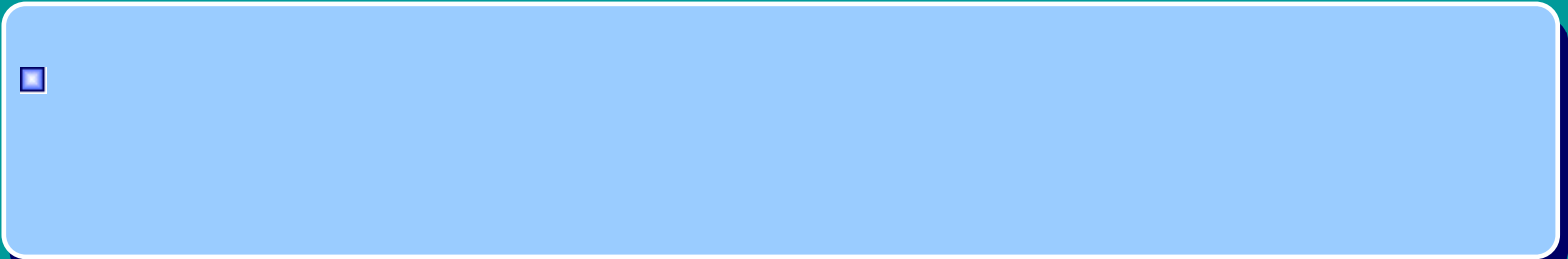
,

,

•

•

가





가

:

•

•

가

)

,

,



‘

’

‘

’

,



,

,

,

,



•

•

:



3 8

130

•

•



,



:



:



‘ ’ ,

□ 適材適所 , ‘ • ’ 公平無私



,



,



,

‘

,

’



가

(

)

2001 , 2002

가



,



,

) 3

,

,

,

,



,

) 가
(17

),

,

,

가

()



,

)

-2

,

,

9

,

3

9

,

,

,



(6)

20



• • 가•



(?)



, ‘ ’



,

,

*

*

*

,

,

-

‘

’

-

가

-



Q&A

,



,



,



,





, , •



相生

:

가

,



● 相生



, , NGO, 3



:

가

가



.

.



.



,

가





가



,



,

,

,

: 가 ?

가

,

,

‘

,



‘

’

:

,

,

,

,

,

: 가 ?()



가

:



,

,

,



가

‘

’



,

가

,

가

:

가

?()



가•

•

•

가

가

가 가

가 가

21



가

•

•

,

,

,

가

:

가

?()



가

:



,

가

가

가



가

가



여성공직자리더십 포럼 - 강연자료 2

20세기 후반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시대였다. 서구사회에서는 1960년대 대항문화(counter-culture)의 흐름 속에서 그동안 뒷전에 밀렸던 몇몇 주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급부상되면서 환경운동, 여성운동이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물결을 탔다. 이런 움직임은 역사적·사회구조적 맥락이 다른 이웃나라들로 번져갔고, 성차별에 대한 반론의 이론화 작업과 아울러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를 위한 행동계획도 차츰 기반을 갖추기 시작한다.

그 속에서 각 분야의 여성의 위상을 분석하고, 여성 진출을 가로막는 사회적·심리적 요인을 도출하고, 진출확대를 위한 실천과제가 제시되기 시작한다. 요컨대 이런 움직임 속에서 여성 연구는 ‘배제(exclusion)의 역사에 항거하고 정치적 형평성(equity)을 추구한다’는 동기를 공유하면서, 이론과 실천의 긴밀한 상호연계 속에서 다양한 연구성과를 축적하게 되었던 것이다.

1970년대에는 이들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여성인력의 사회진출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부문의 개입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그리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나 상당부분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성인력 활용의 사회적 필요성과 당위성에 비추어 미흡함이 큰 것 또한 사실이라서 지속적으로 학술적·사회적·정책적으로 관심대상이 되고 있고, 이는 양의 동서를 가리지 않고 공통의 경향이다.

성차별의 역사가 가장 뚜렷하다고 하는 과학기술계의 사례를 들더라도, 1999년에 개최된 세계과학회의에서는 “과학과 과학지식의 이용에 관한 선언”, “과학의제”, “후속조치” 등에서 여성인력의 과학교육, 과학기술계 진출, 과학정책 의사결정 참여 촉진 등을 강조했다. 또한 EU 공동체의 제5차 연구기술개발 기본계획(The 5th Framework Programme for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에 동참했

던 15개 국가의 전문가 그룹은 ‘헬싱키 여성과 과학그룹’을 결성하고 그 활동을 통해 EU권에서 여성인력의 과학기술계 진출 현황, 진출 장애요인 분석, 장애 제거와 진출 촉진을 위한 각국의 정책적 노력의 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5 과학기술 장기비전’과 2001년에 발효된 “과학기술기본법” 제24조 등에서 명시된 것처럼, 여성의 과학기술 진출 촉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가운데 2002년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여성인력의 과학기술계 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과학기술인력으로 일할 수 있는 수준의 본격적 고등교육을 받기 시작한 지 30년도 못된다는 것을 상기하면, 그리고 1970년대 초 전문과학자로서 커리어를 시작했던 사람으로서는 실로 격세지감이 든다 할 정도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여성의 교육, 사회진출 관련, 복지 정책에서도 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아직 선진국 수준에 이르기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루어진 이들 변화는 실로 획기적이라 할 수 있다. 가사와 육아를 사회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모성보호정책이 적극 추진되고 있어, 현재로서 현장의 체감도는 아직 미흡함이 크지만, 앞으로 기대를 걸게 한다. 전반적인 출산율 저하와 높은 교육열의 영향으로 여학생들은 과거에 비해 훨씬 수준 높은 교육을 받고 자아와 성취욕이 강한 세대로 성장하고 있다. 일본과 비교한다면 평균 수준은 일본이 더 높을지 모르나, 변화의 속도는 우리나라가 훨씬 빠를 것으로 기대한다.

이 모든 변화들은 사회 각 부문에서 여성의 역할이 앞으로 더 커질 것이고, 또 더 커져야 함을 말해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성의 성차별 이슈는 실상 사회의식과 관행과 전통 속에 교묘하게 내재화돼 있는 뿌리 깊은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불식시킨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 때문에

관련되는 모든 부문이 동시다발적으로 변화해야 하고, 특히 정책적으로 선도하는 바가 커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정부는 여성정책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밀고나가 상당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제 참여정부의 전반적인 여성정책의 기조 역시 참여확대의 기치 아래 이러한 긍정적 변화를 형성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기회를 포착하여 여성들 개인의 사회경제적 성취와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성 자신의 훈련과 노력이 필요함은 말할 것도 없다. 흔히 여성들은 개인으로는 뛰어난데 조직을 형성하여 수행하는 작업에는 미숙하다는 평가를 받기가 통상적이고, 이것을 여성의 진입을 거부하는 근거로 삼는 경향이 있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취를 이룩한 여성들은 그 원인이 여성들의 본질적인 속성이 아니라 사회제도, 교육제도,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관 때문이라고 말하면서도 이러한 비판을 얼마간 인정한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인과 조직, 사회 차원에서의 훈련과 경험 축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여성계의 리더십 훈련이 더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는 한편, 일천한 경험과 전통을 딛고 오늘날 이룩한 성취는 여성계의 사회진출의 앞날이 밝으리라는 것을 믿고 있다.

이 중요한 고비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가 열쇠이다.

20세기 산업문명의 절정에서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문명이 열리고 있다. 이른바 디지털 시대,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 속에서 우리는 어지럼증이 날 정도로 세상이 변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새로운 가치관의 태동은 분산화, 분권화를 재촉하면서, 일방향성에서 쌍방향성으로, 중앙집중식에서 네트워크의 긴밀한 연결로 주류를 바꾸고 있다. 그것은 전통사회의 가부장적 사고체계로부터 조화와 화합이 중시되는 여성적 가치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예컨대 조직 운영과 관리에서도 여성적 자질과 특성이 유리한 덕목이 되

고 있어, 때로 남성은 오히려 기존의 위계적 성향의 관습을 버려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는 느낌이다.

이런 물결 속에서 그 어느 분야도 예외일 수는 없다. 문명사상 최초로 여성인력의 활동이 유리한 환경으로 바뀌고 있는 때, 21세기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인구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의 각 분야에서의 명실상부한 참여를 통해 경제사회 발전을 구현해야 한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특히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는 자리에 오르는 여성인력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민간과 공공부문 모두 높은 직위로 오르는 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유리천정’과 상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줄줄 새는 파이프라인의 ‘누수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집중적 극복 전략이 필요하다. 물론 각 분야의 여성인력 진출의 물 모델이 많이 출현하고, 여성인력 진출의 리더십이 탄탄히 마련돼는 것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

그간의 노력의 결과, 여성인력의 양성과 활용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답안이 마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틀을 이루는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서도 상당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부분적이긴 하지만 그 법적인 근거까지도 마련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여성진출 확대와 촉진에 고무적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워낙 불평등의 골이 깊었고, 그것이 법적 제도적 장치에 앞서 모든 사람들의 의식과 관행 속에 마치 유전자처럼 내재된 것이었기에 단기간에 뿌리 뽑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한계이다. 따라서 사회적 변화를 단기간에 추동하기 위해 사회의식 개혁 차원의 ‘알리는’ 노력을 체계적으로 벌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추진전략을 차질없이 실천할 수 있는가에서 성패가 갈릴 것이기 때문에 치밀한 모니터링으로 자체수정 보완 메커니즘을 구축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어떻게 여성인력의 자질을 향상시킬 것인가, 어떻게 여성 리더십을 구축할 것인가. 국가적으로 수요가 증대되는 첨단분야로 여성인력을 끌어들여 교육할 것인가, 여성인력을 어떻게 산업인력으로 양

성 활용할 것인가, 여성인력을 어떻게 정책결정의 중요한 자리에 배치할 것인가 등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하부구조 개혁, 개입 프로그램 개발, 모성보호의 공공기능 확충 등 지원체제 강화, 정보제공 네트워크 구축 등에서 실효성있는 대책을 내어놓고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이제는 실천이다.

이대 행정학과 인터뷰보충자료

국민의 정부 최장수 장관 비결, 리더십, 장관학(?)

1. 김장관께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장수 여성장관이자, 김대중 정부 최장수 장관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환경부장관의 평균재직기간의 거의 5배에 이를 만큼 장수한 것은 물론이고요. 업무에 관한 전문성은 물론 조직장악력, 관련부처 조정력, 민원해결 등 자질과 추진력에서 대단한 역량을 갖추지 않고서는 달성할 수 없는 기록이라고 생각되는데, 스스로 김장관의 리더십의 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3년8개월을 옆에서 겪어보고 환경부 직원들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 욕심이 엄청나게 많고 따라서 사람 욕심이 많다’고요. 저는 조직의 생명은 사람이고 특히 **리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동안 일하면서 그 생각은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환경부의 개방형 국장 채용이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는 것과도 관련이 되는 것이지요.
- ☐ 그런데 리더십을 포함해서 저에 대한 평가는 다른 분들이 객관적인 시각에서 해주시는 게 정확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건전한 사고방식과 민주적으로 열린 일하는 방식을 정착시키고 이에 역행하는 분위기는 설자리가 없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어느 조직이건 역량과 자질이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모여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생산적인 조직문화가 창출될 것이고, 조직구성원들이 맡은 바 임무와 사명을 훌륭하게 해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어느 조직이거나 그렇게 이상적으로만 짜여질 수는 없는 일이고, 따라서 주어진 한계 내에서 人事를 하는 것이 가장 마음 쓰이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 인사원칙이라고 한다면, 사람마다 소질과 적성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되 人事效果는 철저하게 ‘일 중심, 성과 중심’으로 ‘**公平無私**’하게 **실시하고자**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람이 반듯해야 일도 반듯하게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인사를 하다보면, 조직화합과 배려 차원의 人事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구요. 역시 사람이 사는 일은 조화와 균형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일하면서 조직내 和음을 최대한 강조해왔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남의 일이라 외면하지 말고, 나의 일로 여겨 함께 대처해야 한다, 민원업무는 내 자신 또는 내 가족의 일로 생각하고 처리해야 한다, 등등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말하자면 잔소리지요. 그런데 그 덕분이랄까요. 주요 환경정책을 수립하거나 특정 현안이 불거져 나올 때 어려움이 클 때가 많습시다만, 한마음 한뜻으로 ‘**전원수비, 전원 대처**’식으로 일하는 것을 보고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환경행정은 특히 이해그룹은 물론 대국민 설득을 잘 할 수 있어야 정책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열정과 정성을 갖고 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저는 장관으로 격에 맞게(?) 일했다기보다는 사무관, 과장, 국장일 구분없이 마구잡이로 하다 못해 보고서 교정까지 일일이 손대는 식으로 일했습니다. 실무자들이 들고 중요한 보고서는 빨간 펜으로 ‘딸기밭’을 만들기도 했구요. 처음에는 우리 직원들이 좀 긴장하는 듯 했지만, 곧 익숙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 개인적으로는 공직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특히 私心を 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公僕**으로서의 책무와 사명을 다 해야 한다는 신조로 일했습니다.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하면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하고, 해서는 안될 일이라면 누가 뭐래도 안된다는 원칙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판단이 얼마나 옳은가의 문제인데, 그것은 건전한 양식과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제게 최장수장관의 비결이 뭐냐고 하는 질문을 참 많이 주십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저의 장관직 수행에 대한 과분한

평가는 주위의 많은 분들께서 도와주시고 저희 환경부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해준 덕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런 도움을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맞는 얘기지요. 오늘날처럼 복잡한 사회시스템 속에서 혼자서 척척 해치울 수 있는 일은 거의 없고, 서로 힘을 모아야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처럼 陰陽의 德을 입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위의 과분한 지원과 격려가 저의 오늘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면서 ‘소중하고 좋은 인연’에 대해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 지난 4년을 돌아볼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이였습니까? 일전에 어느 자리에서 3대강 물관리특별대책과 특별법 제정의 성공을 가장 큰 보람으로 꼽았는데, 그때 겪은 어려움은 어떤 것이였는지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해가 첨예하게 상충되는 이해당사그룹들을 설득했는지요?

- 솔직히 가장 기쁘고 보람된 일은 법적 근거에 의한 정부부처업무 평가에서 2001년에 이어 2002년도에도 환경부가 최우수부처로 선정된 것입니다. 솔직히 바람 잘날 없다고 하는 환경행정을 맡아 이런저런 한계를 느끼며 때로는 고달프기도 했지만, 이처럼 2연패를 했다는 사실에 빛나는 졸업장에 우등상까지 받은 기분입니다.
- 사실 그 동안 일하면서 제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힘겹다거나 하는 느낌은 별로 없었습니다. 눈앞의 일을 풀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마무리하는 시점에서는 지나온 3년8개월의 세월이 때로는 살얼음판이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 그동안 기억에 남는 일들이 많습시다만, 대표적인 몇가지만 꼽아 보면,
- 가장 오랜 시간을 노심초사했던 것이 낙동강특별법을 비롯해서

금강·영산강의 3대강 수계특별법을 제정하고 하위법령을 제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업계·관련부처 협의 등 수많은 난관을 극복 하면서 천연가스버스보급사업을 추진해서 2천8백여대를 돌파한 것, 폐기물관리에 있어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한 것 등이 무던 히도 애를 많이 먹었던 정책사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와 정부가 한 마음으로 실천했던 월드컵 환경대책 등은 즐거운 기억입니다. 퇴임하고 나서 시내에서 운행되는 천연가스버스를 보니 감격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 그리고 성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전국을 다니며 각 계 각층과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3대강 특별법을 통과시켰을 때의 감격은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 3대강 특별법 제정과정은 환경행정의 벤치마킹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3월7-8일에 있었던 국무위원 국정토론회 워킹숍에서는 제가 낙동강수계특별법에 관해 성공사례 강연을 했습니다. 좀 거북스러울법도 한 자리였지만, 물러나거나 현직이거나 국정에 같이 뜻을 모은다는 뜻에서 의미있는 참여였다고 생각합니다.
- 3년에 걸쳐, 십수년 묵은 민감한 현안을 둘러싼 쟁점을 풀어가면서 참여행정의 진수를 체험했다고나 할까요.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권위주의적 하향식 의사결정 패턴에서 완전히 벗어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와 함께 만들어냈기 때문에 수계별 특별법 제정은 성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다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견(異見)을 좁히기 위해 공식, 비공식 접촉을 계속하면서 매우 더디고 험난한 길이었지만 무려 300여회에 걸친 끊임없는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그 결과 가장 빠른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은 거기 관여했던 우리 모두의 승리였다고 자부합니다.
-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 등을 풀면서 상·하류간에 얽히고 설킨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관건이었는데, 이런 과정에서 여성장관으로서의 유연성과 설득노력이 아니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말씀들도 하십니다. 진솔한 태도로 신뢰를 바탕으로 이해당사자들과 대화하고

협조를 이끌어냄으로써 WIN-WIN 방식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는 평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3. 역대 여성장관들의 경우, 전문성 부족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업무능력에서 뿐만 아니라 공인(公人)으로서의 처신, 품위 등으로 구설에 휘말린 일도 있었지요. 김장관께선 이런 지적을 거의 안 받았던 것 같은데, 후배여성들을 위해 여성 고위공직자로서의 성공비결이랄까, 조언을 해주신다면?

□ 특별히 비결이라 할만한 것을 갖고 업무에 임한 것은 없습니다.

- 그저 언제 어느 자리에 있거나 하루하루 크고 작은 일에 誠心을 다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아왔고, 늘 正直해야 한다는 것을 信條로 삼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그간 장관직을 수행하면서도 교수생활을 하던 27년간의 세월과 별로 달라진 게 없고, 굳이 표현한다면 「盡人事待天命」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살았습니다. 그 무엇에도 연연하지 않고 제 삶이 자유롭고 평안하기를 바랐다고나 할까요.

□ 이미 우리 사회는 여성이라고 해서 일하는 데 불리하다기 보다는 오히려 강점을 갖게 되는 시대로 변화의 물결을 타고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과 성과 측면에서 여성성이 오히려 보탬이 되는 시대로 바뀌고 있는 것이지요.

- 이를테면 다원화·복합화된 사회에서 권위주의적 사고가 아니라 섬세함과 치밀함으로 대처하고, 사회 각 부문 이해당사자간의 파트너십을 중시하고 조화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중요한 德目으로 떠올라 있고, 그런 관점에서 여성적인 시각과 접근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 그렇다고 女性性 또는 感性에 치우친다는 것이 아니라 냉철한 論理와 合理性에 근거하되 일하는 방식에서 일정부분 감성적 접근이 성과를 높이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학기술분야(화

학, 科學史)에서 교육받고 훈련받았다는 것이 사회현상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학적 접근만으로 인간사회의 일을 풀 수 없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따라서 합리성과 감성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전문정보다는 상위개념인 통찰력이 업무능력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 여성계 자신도 여성에게 활짝 열리고 있는 기회의 창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공무원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계발하고 철저한 프로정신으로 자신을 단련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특정분야의 전문성과 기능성을 갖추는 것은 기본이고, 더욱 고차적인 소양으로서 상대방과의 의사소통 능력, 애로타개 능력, 조직을 이끌고 화합을 이루어 낼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여성 특유의 보살핌(careness)의 능력과 섬세함은 갈등조정 에서 강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흔히 여성에게 부족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합리적인 판단과 논리적 설득력, 강력한 추진력을 갖추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성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철저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무장하여 국정수행 업무에서도 주변인력이 아니라 핵심인력으로서, 예비군이 아니라 상비군으로서, 그리고 남성의 보조인력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동반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성공은 보장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 세계적인 컨설팅업체인 매킨지사의 한국 여성인력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한국여성의 사회참여 지표와 활동내역은 70년대 캐나다 수준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의도적인 여성인력 활용촉진정책을 펴으로써 민간부문도 자극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장관직 수행 경험에 비추어 어떤 소감이십니까?

□ 모든 분야가 그러하듯이, 우리 사회의 여성문제도 급격한 변동의 소용돌이에 처해 있는 형상입니다. 아직도 여성의 전통적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시대적 변화에 따라 국가 경쟁력 강화에서 여성인력 활용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대두돼 있으니까요.

- 여성인력의 활용에 있어서는 요컨대 보다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활용촉진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선진국에서도 이미 초기 단계에서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affirmative action을 시행해서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전략적으로 그런 정책 기조를 택하고 있습니다.

□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사회 시스템을 보완하는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고, 따라서 정부의 선도적 역할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여성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을 얻고 있으나, 아직도 사회의식을 포함하여 현실적 장벽을 허물기에는 모자람이 있습니다.

- 정부차원의 제도개선과 함께 우리의 관념과 문화를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발전시키는 노력이 보다 강화돼야 할 것입니다. 여성인력의 잠재력을 현실화할 수 있는 민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회 참여의 폭과 수준을 높이는 등의 노력은 사회 각 부문으로 확대되어 공공부문뿐 아니라 생산·서비스산업 전 분야에 걸쳐 퍼져 나간다면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5. 취임 초기 저명한 문인들을 환경생태여행에 초대하고, 그분들이 언론에 기고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상당한 홍보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문적 배경이 과학자인데,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일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저의 학문적 배경은 자연과학이지만, 科學史 등 學際的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고, 저술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배경과도 연관되는 것이겠지만, 명확한 논리나 합리성만으로 사회현상을 이해할 수 없고 풀 수도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즉 복합적인 인간사회

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學際的인 접근이 필요하고, 그 가운데 문학과 예술은 우리의 참모습을 비춰 보여주는 지적 활동이고, 그런 점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접근에서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 실제로 지난 '99년 낙동강 대책을 수립할 때, 문인들께서 '물사랑 실천협의회'를 결성해서 영남지역의 문인들과 만나면서 특별대책을 마무리짓는데 큰 도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 이제 시대가 바뀌어 행정도 법령과 규정에 의해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문학적인 감성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의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부가 권위주의적으로 국민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정부지배(government)**로부터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보편적인 가치를 실천하고자 힘을 모으는 **새로운 가버넌스(governance)**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난 월드컵은 자발적으로 표출된 거버넌스의 성공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6. 퇴임후 새로운 구상과 소감을 말씀해주시죠.

- 그동안 환경부 장관 일 밖에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제 새로운 생활에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30년간 교수생활을 했으니 역시 강단으로 돌아와서, 4년간의 행정경험이 보탬이 될 수 있는 강의를 하는 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도 유익한 기회가 되는 거지요. 2003년 봄 학기, 서울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기술정책대학원과정(학제적 프로그램)에서 '환경 및 에너지산업정책' 강의를 했습니다. CEO 초빙교수 자격으로요.

그리고 행정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쪽에도 새롭게 공부하는 마음으로 사외이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일로는 대통령 자문회의로서 국민경제자문위원, 동북아 경제중심추진위원, 정책기획위원 등의 일을 맡아 장관직에서 얻은 경험의 연장선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 지난 잘을 돌이켜 보면, 학창시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목표나 '자리'를 향해 자신을 맞추고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저 저 생긴 대로' 제게 주어진 자리에 '誠心을 다 한다'는 일념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27년간의 교수생활에서나 3년8개월의 장관직에서나 저의 내면적 삶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일터가 바뀐 셈이지요. 이제 보다 다양한 일터에서 새로운 경험을 쌓는 것도 활기있는 삶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사람은 평생 지적인 호기심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소에 생각해 왔고, 그렇게 또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다보면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살아가는 보람은 크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제게 직접, 간접으로 도움과 격려를 주신 학계, 시민단체, 여성계, 문화계 그리고 특히 언론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게 과분한 영광을 안겨준 조국의 국운융성과 발전을 위해 항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3대강 특별법 제정에 얽힌 묻혀버릴 수도 있는 이야기

이 글은 '98.2~'00.8월까지 환경부 수질보전국장으로, '00.8~'01.3월까지 환경정책국장으로, '01.3월부터는 기획관리실장으로 3대강특별법 제정에 직접·간접적으로 실무를 맡아온 곽결호(郭決鎬)실장의 글로서 사실적 기록성을 앞세우기 위해 이 글에 나오는 분들의 실명(實名)에 존칭사를 생략하였습니다.

※ 곽결호 실장은 '03.3.3 환경부차관으로 임명되었음.

감격의 순간, 3대강특별법 국회 통과!

2001.11.3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낙동강특별법, 금강특별법, 영산강·섬진강특별법 등 3대강특별법들이 여야 만장일치로 심의·의결된 것을 선언하기 위해 이윤수(李允洙)위원장이 의사봉을 세 번 두들긴 뒤, 곧 이어 주어진 인사말씀 기회에 김명자(金明子) 환경부장관은 어렵고 힘들었으나 보람찼던 2년반의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미리 준비된 원고도 없이 다음과 같이 묻어두었던 소회를 밝혔다.

" 존경하는 이윤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니까 참으로 감회가 깊습니다. '한강에 이어서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우리나라 물관리대책의 새로운 틀을 짜는 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훗날 평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그것 아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비관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할 바를 최후까지 최선을 다한다 그런 각오로 임했고, 저는 오늘 아침 이 자리에 참석하면서도 새삼스럽게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어려웠지만 우리 모두 같이 손잡고 오늘에 이르렀고, 오늘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심의·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같이 손잡고 이루어냈다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려웠던 만큼 더 보람있는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날 자리를 같이한 수질보전국장을 비롯한 수질보전국 직원뿐 아니라 환경부 전직원은 숙연한 가운데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환경부에서 일한다는 것에 크나큰 보람을 느꼈다.

이어서 김장관은 "각자 어려운 사정을 갖고 있으면서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래서 한 걸음씩 양보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미래를 보고 결단을 내린 결과 오늘의 특별법 통과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하는 점에서 우리 환경행정사(環境行政史)에서도 그렇고 환경운동사(環境運動史)에서도 그렇고 하나의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아주 민감한 이해관계가 얽힌 어려운 환경행정을 풀어가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좀 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을 우리 사회가 계속 키워간다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넉넉히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희망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 저는 뭐라고 말로 글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격스럽고 제가 일하면서 아마 일생에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게 오늘 이 하루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진심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라면서 본인의 심경을 즉석 스피치로 이어 나갔다.

이날 저녁 간부들과 함께 한 저녁자리에서 김장관은 입에 잘 대지 않는 술잔을 그것도 이른바 폭탄주 석잔을 받아마셨다. 건너야 할 강이 셋이었으니 어느 강을 버릴 수 있었겠느냐는 주위의 권주사(勸酒辭) 때문에 한잔이나 두잔으로 멈출 수는 없었던 것이다.

김장관의 환경노동위원회에서의 마무리 인사말은 3대강 수계법 심사과정에서 가장 문제 제기가 많았던 구미의 지역구 출신 김성조(金晟祚)의원이 비록 야당의원이었지만 김장관이 헤쳐온 험난한 과정을 다음과 같이 대변한 다음에 이어진 것이어서 모든 듣는 이들의 마음에 진한 감동을 심어주었다.

“환경부장관님, 최장수 장관이 된 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어찌면 이 법을 만드는 것이 700리 낙동강물 장정(長征)보다도 더 어려웠지 싶습니다. 때로는 가파른 곳도 갔을 것이고 때로는 완만한 곳도 갔고 어느 때는 오르지 못해서 물이 찰 때까지 기다려서 올라갔고 이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제 출발 선상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을 시행하는데 당초 목표대로 물을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실행되어야 하고, 또 더군다나 그것이 지나치게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되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하기에는 앞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관님의 노력을 부탁드리고, 제가 낙동강수계특별법과 영산강수계특별법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법안심사소위에서 반대한 이유는 적어도 이 법이 법으로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 법과 관련된 모든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거의 반대하는 주민들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법을 시행하면서 또 다시 시행과정에서 일부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지역이나 주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위법령 제정과 정책집행, 예산배분에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낙동강법 심사과정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심적 부담이 컸던 김의원 역시 그의 심경을 있는 그대로 위와 같이 피력했다.

2001.12.7 제225회 정기국회 제21차 본회의, 이만섭(李萬燮) 국회의장이 의사일정 제22항, 제23항, 제24항으로 상정된 3대강특별법안들을 의결하기에 앞서 “이의 없으십니까”라고 묻자 의원석 여기저기서 차례로 “없습니다”라는 큰 목소리의 답변이 나왔다. 이에 국회의장은 “모두 시원하게 이야기해줘서 고마워요”라면서 이윤수 환경노동위원장이 앉아있는 의석을 바라보며, “이윤수 의원 아니예요? 의정활동을 제일 열심히 한다는 것을 분명 기록해 두겠어요”라면서 그 긴팔로 의사봉을 세 번 힘껏 두들겼다. 3대강 수계, 이름하여 낙동강과 금강, 그리고 영산강·섬진강의 악화되는 수질을 1~2급수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가 마련한 3대강물관리특별대책 추진은 이제 3대강 특별법 제정으로 뜻을 올렸다. 그러나 2년여에 걸친 세월의 뒤편에는 수많은 사연과 가슴 졸이는 곡절들이 여기저기 숨겨져 있다.

낙동강물관리특별대책안, 영남지역을 들쭉서 놓다

영남지역의 전통과 문화의 터전이자 영남사람들의 삶의 젖줄, 그 낙동강이 2급수를 넘어 식수원으로 쓰기에 버거운 3급수로 떨어진 것은 일찍이 공업화를 지향한 거점개발(據點開發)이 영남지역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1970년 후반에서 비롯된다.

1991년 폐놀사고가 터지면서, 그리고 대구위천공단 계획이 검토되면서, 낙동강은 더 이상 영남주민들의 보금자리가 아니라 신음하는 강, 갈등의 강으로 바뀌고 말았다.

1999년 초부터 환경부는 전년도에 마무리한 한강대책에 이어 두 번째로 낙동강종합대책 수립에 착수하였다. 한강대책을 수립하면서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는 있었으나, 낙동강을 향한 앞길은 험난하기 짝이 없었다. 우선 대책지역이 한강수계처럼 팔당호를 경계로 한 상·하류지역간의 단순한 갈등 구조에 비견할 수 없는 낙동강수계이고 보니, 수량부족에 따른 댐 건설 논쟁, 위천공단 개발을 둘러싼 지역간 갈등, 언제 터질지 모르는 수질오염사고의 위협 등 그 형상은 첨예함을 넘어 부딪히면 곧바로 깨질 수밖에 없는 유리잔과도 같았다.

질은 안개처럼 모든 것이 불확실한 가운데, 그해 6월 대책 수립의 최고 책임자인 장관이 학자출신의 여성, 김명자 장관으로 바뀐다. 행정경험이 전무한 학자출신인데다 그것도 연약한 면모의 여성장관이 과연 이 난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 환경부 내에서는 물론 환경부 밖에서도 기대를 거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아니 좀더 솔직히 말하면 기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심영섭(沈瑛燮) 환경부차관이 주관하려던 대책시안에 대한 지역별 공청회가 진주에서(99.10.25), 부산에서(10.27), 대구에서(10.29) 어김없이 순차적으로 무산되고 만다. 특히 진주에서는 5천명의 성난 주민들이 운집한 가운데 환경부에 대한 화형식까지 치뤄지면서 공권력은 그저 큰 불상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심초사 할 뿐이었다. 사태가 이쯤 되고 보니 낙동강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환경부의 노력은 초장부터 완전히 물 건너가는 듯 했다.

세 곳에서 열기로 예정되었던 공청회장에서는 각기 다른 주장들이 쏟아져 나왔다. 진주에서는 부산지역에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계획되었던 지리산 식수댐 건설 반대를 주장했고, 부산에서는 위천공단건설 반대를 외쳤고, 대구에서는 경북 북부지역 댐건설 반대를 들고 나왔다.

한강이 2천만 수도권주민의 젖줄이라면 낙동강은 1천3백만 영남주민의 생명선이다. 한강수계에는 다목적댐 2개소(소양강댐, 충주댐) 이외에 대규모 발전댐이 8개나 들어서 있어 항상 풍부한 유량을 자랑한다. 낙동강수계에는 안동댐, 임하댐, 합천댐, 남강댐 등 4개의 다목적댐이 건설되어 있

으나, 그 저수량은 모두 합쳐도 27억7천만톤으로 한강수계의 소양강댐(29억톤)이나 충주댐저수량(27억5천만톤) 정도에 그치고 있다.

갈수기에 흐르는 낙동강의 유량은 한강의 4분의 1정도밖에 되지 않아 하천으로서 자정능력(自淨能力)을 상실하고 있다. 낙동강유역에 5~6개소의 갈수조정댐을 건설하여 갈수기에 유량을 현재보다 두배 가량 늘린다는 내용으로 낙동강물관리대책 시안에 들어있던 댐건설 구상이 잘못 이해되면서, 공청회는 아예 원천봉쇄되고 만 것이다.

지리산 자락에는 지리적 조건만 보면 두어곳 정도 댐을 막을 만한 장소가 있긴 하다. 그러나 그곳에 댐을 막는다 하더라도 그물은 어디까지나 낙동강유량을 늘려 자정능력을 키우는 데 이용코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즉 직접 부산지역 식수로 공급하기에는 수량도 부족할 뿐더러 천문학적인 공사비가 들어가는 불가능한 일로서 정부로서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었다.

낙동강물관리대책은 죽어 가는 낙동강을 살리고자 하는 대책이다. 위천공단문제는 지금도 유효하게 총리실에 설치되어 있는 『낙동강수질개선과 위천공단대책위원회』에서 해결할 사안이다. 그런데도 대구에는 위천공단이라는 선물을 주고, 부산에는 지리산으로부터의 맑은물 공급이라는 혜택을 주기 위해서 힘없는 서부경남(西部慶南)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의도가 낙동강물관리대책에 깔려있다는 주장이 진주와 부산지역에서 널리 확산되었던 것이다.

주민속에 파고 든 환경부장관

김장관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고심한 끝에 대책시안에 들어 있었던 5~6개 지역댐 건설안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당해 지역의 주민입장에서 보면 이다지도 중요하고도 민감한 정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밀어 부친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합당치 않거니와 낙동강을 살린다는 근본취지를 살릴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없다는 판단이었던 것이

다. 그리하여 대책추진의 방향전환을 결행했던 것이다. 요컨대, 지역전문가 등을 포함시키는 조사단을 구성하되, 물이 얼마나 모자라는가, 현 체제에서 물을 더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있다면 어떤 것들인가, 대형댐 건설 이외의 새로운 대안은 없는 것인가 등을 현지조사에 바탕하여 찾아내고, 그 대안에 대한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줄거리를 잡았던 것이다.

김장관은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호소문을 직접 작성하여 '99. 11. 1일 2만2천여 영남지역주민에게 보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계와의 접촉을 발이 부르뜨도록 계속하였다.

낙동강을 사랑하는 문인(文人)들로 『맑은물사랑실천협의회』도 태어났다. 이 협의회는 읽는 이의 마음을 적시는 물사랑 글을 내어 놓았다. '99.12.22 일이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강, 우리의 물에게 용서를 구하러 여기에 섰다. 좀더 배불리 먹기 위해, 좀더 편히 살기 위해, 좀더 즐기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강, 우리의 물을 몹시도 괴롭혀 왔음을 뼈저리게 뉘우치려는 것이다. 보라, 저 강 저 물은 저리 깊이 앓고 있음에도 민족의 젖줄로서 의연히 흐르는 모습, 참으로 눈물겹지 않은가.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죄악을 버리러 여기에 섰다. 우리의 강이 죽어가는, 우리의 물이 썩어가는 책임을 나 아닌 누군가에게만 물으려는 비겁함과, 인내와 화합이 절실한 시간을 편리와 대립으로 허비하는 우둔함과, 현실을 이상만으로 굴복시키려는 무모함을 티끌 한 점 없이 쓸어내려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가슴속에 '맑은 물사랑'을 단단히 심으려 이 땅에 섰다. 강을 더럽히는 일은 가장 두려운 죄로 여길 것이며, 강이 살아야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잊지 않을 것이며, 마실 때마다 물 한 모금의 고마움을 되새길 것이다.

오늘 우리는 다시 저 강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두 손 오므려 목을 축일 날이, 우리가 떠나고 우리 아들딸까지 떠나고 난 그 이후에야 올지라도, '맑은 물 사랑'에 정성을 다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는 『맑은 물 사랑 선언문』을 발표하게 된 것도 김장관의 SOS를 문인들이 기꺼이 받아들

인 결과였다.

공청회가 무산된 이후 김장관이 직접 쫓아다닌 토론회, 좌담회, 간담회, 설명회가 무려 40여차례였다. 그 가운데 결정판은 12.23 MBC 영남권 3사, 즉 대구, 창원, 부산총국이 주관한 지역시민단체 대표들과의 2시간 동안의 생방송 심야토론회였다. 김명자장관은 토론자로 직접 나서서 대책안이 담고 있는 낙동강을 살리고자 하는 정부의 충정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영남주민 모두가 마음과 뜻을 모아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다.

TV토론회가 끝난 후 김장관과 문정호(文廷虎) 수질정책과장은 부산환경운동연합 구자상(具滋相)사무처장, 마창환경운동연합 이인식(李仁植)집행위원, 진주환경운동연합 김석봉(金錫峯)사무국장 등 낙동강을 지키는데 앞장서면서도 정부대책안에 비판적이었던 지역시민단체대표들과 부산 청사포 방과제 앞 포장마차에서 곰장어와 소주잔을 앞에 놓고 새벽 4시까지 난상토론을 계속하였다.

동지선달 선창가 바닷바람은 차디차기만 하였으나 낙동강을 살리고자 하는 여성장관과 시민단체대표들간의 논쟁은 뜨겁기만 하였다. 그것은 정부와 영남 주민간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불신의 골이 메워지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복병은 또 있었다. 어렵사리 시민단체의 지지를 이끌어낸 가운데 정부대책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열리게 되어있던,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과 시·도지사가 함께 참석하는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 회의가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바로 위천공단개발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문희갑(文喜甲) 대구광역시장이 참석하지 않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장관은 곽결호(郭決鎬)수질보전국장을 대구시에 내려보내 하루종일 대구시 환경국장실과 부시장실 그리고 시장실을 오락가락 맴돌면서 문시장의 회의참석을 간청토록 하는 한편 김장관 본인은 문시장에게 전화로 회의참석을 간곡히 요청하였다. 그리고 김장관은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전날 서울에서 열린 다른 회의에 동석한 문시장에게 오늘 대구로 함께 내려가 내일 회의에 나란히 같이 올라 오자며 문시장을 물고 늘어졌다.

'99.12.30 국무총리주재로 관계부처 장관과 낙동강수계의 6개 시·도지사

가 참석한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 자리에서 낙동강 생명찾기 대장정, 낙동강 물관리종합대책이 정부합동대책으로 확정되는 순간 김명자 장관의 표정은 한없이 밝았으나, 속으로는 복받치는 감정을 억제하기 힘들었으리라 짐작된다. 김장관은 정부대책 확정 후 지난번에 편지를 보낸 영남지역 2만2천여 주민들께 다시 감사편지를 띄웠다.

김장관은 낙동강대책보고서 서문에서 "오늘 우리는 『낙동강 물관리종합대책』을 확정함으로써 절실하면서도 힘들었던 『낙동강 살리기 대장정(大長征)』에 뜻을 달았습니다."라고 시작하면서, "그 어느날 낙동강은 대립과 갈등의 강으로부터 화해와 협력의 강으로 살아나, 1천3백만 영남주민의 공영(共榮)의 강이 되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라고 쓰고 있다. 정부대책을 확정하기 위해 환경부 사람들이 영남지역에 내려가 70여차례 대화를 거치면서 난제 중의 난제였던 낙동강대책을 확정된 감회를 결연한 의지와 함께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낙동강특별법안, 국회제출에 이르기까지

낙동강대책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풀어야 할 과제는 한둘이 아니었다. 당초 시안에 있던 갈수조정댐 대신에 어떤 방식으로 낙동강의 갈수기 유량을 늘릴 것인가, 오염총량관리 대상항목에 당초의 BOD 이외에 COD와 질소·인을 추가할 것인가, 식수 공급량의 93%를 오염사고에 취약한 낙동강 하류 표층수(表層水)에 의존하고 있는 부산지역에 대한 취수원다변화(取水源多邊化) 방안은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 등등 상하류 지역간 이해가 엇갈리는 사안은 지역전문가들로 구성된 낙동강물이용조사단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2000년 새해가 밝으면서, 환경부는 이들 문제를 다룰 물이용조사단 구성에 착수하였다. 그리고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중 수변구역 지정, 오염총량관리제

도입, 물이용부담금제도, 산업단지 완충저류조(緩衝貯留槽) 설치 등 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책을 담은 낙동강특별법 제정작업에 들어갔다.

갈수기유지용수관리방안조사반, 취수원다변화방안조사반 그리고 오염총량관리시행연구조사반의 3개반으로 이루어진 물이용조사단은 낙동강의 발원지인 강원도를 포함한 낙동강수계 6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지역전문가와 환경부와 건교부가 추천한 전문가 등으로 반별 8명 총 24명으로 많은 협의를 거치면서 신중하게 구성되었다.

2000.2.18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개최된 『낙동강물이용조사단』 발단식에 김명자 환경부장관이 직접 참석하였다. 이날 지역시민환경단체는 물이용조사단의 모든 회의가 공개되지 않는다면 조사단이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이를 인정치 않겠다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말았다. 여기에는 조사단이 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도록 사전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이에 김장관은 전문적, 중립적, 객관적인 타당성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회의 결과는 공개하기로 하되 회의 자체는 기탄없는 논의와 결론 도출을 위해 비공개리에 진행토록 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하였다. 그로써 조사단과 시민환경단체의 상충되는 입장을 모두 수용하였던 것이다.

이날 『낙동강물이용조사단』의 단장이 선임되었는데, 영남대학교 토목공학과 이순탁(李舜鐸)교수가 그 주인공이었다. 그런데 다음날 이 때문에 난리가 났다. 진주환경운동연합 김석봉 사무국장이 '이 교수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비상임 이사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댐 건설의 필요성을 주장할 것이므로 단장직은 물론 조사단에서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그 발단이었다. 이교수는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수문(水文)과 수자원 분야의 최고 전문가의 한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 교수로서, 특히 낙동강수계에 관해서는 많은 실증적 연구업적으로 낙동강이 안고 있는 물 문제에 정통한 전문가이다.

갑론을박의 오랜 논란 끝에 결국 이 문제는 절충안으로 매듭지어졌다. 1년간 운영될 물이용조사단의 단장은 4개월씩 대구·경북→부산→경남지역을 대표하는 3개 조사반장들이 윤번으로 맡기로 하는 선에서 간신히 마무리되었다. 한마디로 낙동강을 살리기 위한 기본 틀로서 정부차원의 낙

동강대책은 확정되었지만, 첫 단계 세부시행계획을 짜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의 과정이 얼마나 험난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환경부는 낙동강수계를 공유하는 강원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담당 국·과장들과 법률안의 내용을 성안하는 한편 경북의 봉화, 안동, 그리고 경남의 진주, 부산 등 영남 곳곳을 다니며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을 만나 때로는 여관에서 숙박을 하며 때로는 소주잔을 나누면서 법률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일에 정성을 쏟았다.

그러나 복병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다. 그것은 전형적인 규제신설법안일 수밖에 없는 낙동강특별법안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내는 일이었다. 알려져 있다시피, 새로운 규제신설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 있는 규제도 없애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일하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로서는 무려 21종에 달하는 신설규제를 담고 있는 낙동강특별법안이었으니, 아무리 강을 살리는 일이라 하더라도 결코 쉽게 통과시켜줄 리 만무했던 것이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열리면 해당부처에서는 통상적으로 담당국장이 출석하여 설명하고 답변하는 것이 관례이다.

그러나 2000.5.26 본 위원회가 열리는 날, 김명자 환경부장관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지역마다 이해를 달리하는 영남지역 주민들간에 어렵게 도출된 합의를 바탕으로 성안된 낙동강특별법안에 대하여 그 어느 조문 하나도 지금 빼게되면 훗날에는 더 강한 규제 없이는 낙동강을 되살릴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낙동강법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밖에 없었다. 이어 법제처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00.6.23 드디어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국회에서 속절없이 표류한 낙동강특별법

앞에서 약속한 것처럼, 낙동강특별대책 수립 과정과 그 이후 특별법안 과정에서 환경부 사람들은 낙동강수계내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지역주민대표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대화를 나눈 결과 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착각을 한 것이 있었다. 즉 낙동강의 생명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에서의 법률안 통과는 어렵지 않으리라 믿고 있었던 것이다.

정부가 낙동강특별법안을 만들 당시는 15대 국회였다.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는 대구·경북지역을 대표하는 대구 동구출신의 서훈(徐勳)의원과 부산·경남지역의 입장을 대변하는 부산사상구 출신의 권철현(權哲賢)의원이 나란히 야당석에 앉아 있었다. 이 두 분은 환경정책의 부실함을 지적할 때에는 함께 목청을 높이다가도 낙동강이나 위천공단문제가 제기되면 반대방향으로 갈라서기 일췌였다. 그러나 낙동강특별법에 관한 한, 정부입법안대로 가는 수밖에 없다는데 묵시적인 합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2000.5.30 새로이 출범한 16대 국회가 구성되고, 환경노동위원회의 구성이 달라지자 사정은 영 판판이 되었다.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경북 구미의 김성조(金晟祚) 의원과 부산 남구의 김무성(金武星)의원이 새로 들어오면서, 공교롭게도 낙동강 중상류지역과 하류지역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영남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 65명의 구성은 무소속인 울산 동구출신 정몽준(鄭夢準)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야당인 한나라당 출신이다. 따라서 환경부 장·차관은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조찬간담회를 거치면서, 지역간에 어렵게 도출된 합의가 깨어지지 않도록 정부입법안대로 심의·의결해줄 것을 거듭거듭 요청하였고, 심지어 김장관은 자구 수정 이상의 변화는 미묘한 균형을 깨뜨림으로써 무위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 결과 정부입법안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에 이해를 얻어내고, 법률안 심사가 이루어지는 2000년 9월 정기국회가 어서 개최되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그러나 사태진전을 알 수 없는 것이 정치인가, 2000.10.24 부산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낙동강본류에 수변구역을 지정하고 부산지역 상수원인 물금지역의 수질이 2급수로 개선될 때까지 상류지역개발을 동결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의원발의 낙동강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일이 벌어졌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도 의원입법안을 지지하면서 예정된 대통령의 부산순시일정에 맞추어 대규모 시위에 나서겠다는 움직임을 보였다. 2000.11.8일 부산시청 회의실, 한껏 고무되고 격앙된 40여명의 부산지역 여론 주도층 인사들을 상대로 김장관은 대통령 앞에서의 시위로 낙동강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장관이 먼저 나서겠다며 지역정서에 편승한 감성적 접근이 아니라 상하류간 이해 관계를 바탕으로 한 이성적 해법을 함께 모색할 것을 호소하였다.

부산이 아닌 경북지역, 당연히 모든 시장·군수들이 격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동안 양보해서 인정해 왔던 정부입법안 내용을 완화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사태로 이어지면서, 경북지역 국회의원들마저 법률제정에 부정적인 분위기로 돌아서고 말았다. 2000년 정기국회를 맞았으나, 낙동강특별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 접수만 된채 상정도 안되어 법안심의에도 들어가지 못한 상태로 계류되면서 세월이 가고 있었다.

해를 넘겨 2001년 4월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낙동강특별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그러면서 안동지역에서는 대규모 법제정 반대시위가 벌어졌고, 이어서 반대시위는 봉화지역으로 번지고, 반대투쟁이 다시 구미지역으로 확산되어 나갔다.

설상가상으로 건설교통부가 7월 들어 가뭄대책의 일환으로 낙동강유역에 7개의 댐을 건설하겠다는 발표를 하는 바람에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1999.10.25 진주에서, 10.27 부산에서, 그리고 10.29 대구에서 열릴 예정이던 공청회가 난장판이 되고 만 그때 그 상황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낙동강에 발목잡힌 금강·영산강·섬진강

1998.2월부터 수질보전국장으로서 한강대책과 한강특별법 제정에, 그리고 낙동강대책과 낙동강특별법안 제정에 실무를 맡았던 곽결호(郭決鎬)국장이 2000. 8월 환경정책국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후임에 대기보전국장이던 이규용(李圭用)국장이 바통을 이어 받는다.

관리로서의 능력과 부드러운 친화력으로 인재로 평가받는 이 국장은 낙동강특별법안에 대한 대국회 설득하랴, 금강과 영산강·섬진강대책을 수립하랴, 이어서 금강, 영산강·섬진강특별법안 제정에 착수하랴, 하루 24시간이 모자라고 휴일마저 반납하는 그 생애의 가장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피로에 지쳐 눈의 실핏줄이 터지기도 다반사였다.

대전, 청주, 금산, 옥천, 보은, 영동, 장수 등 금강유역 곳곳을 누비며 금강대책시안을 가지고 지역공청회를 간신히 마치고 갔으나 1990년 지정된 대청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제도 때문에 입은 1조원에 이르는 피해보상 없이는 수변구역 지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 지역 주민들의 확고한 입장을 확인하기만 했을 뿐 그 어떠한 타협점이나 절충점을 찾을 수 없었다. 영산강유역은 어떠했는가, 2000.7.18 광주 공청회가 주민들의 항의시위로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한 데다가 이어서 순천공청회(8.9), 목포공청회(8. 11)가 차례차례 무산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결국 그토록 조용하던 한수이남(漢水以南)에 환경부가 격랑(激浪)을 몰고온 꼴이 되었다.

이때 금강수계 쪽에서는 강상준(姜祥俊) 충북대학교수·염우(廉鈺) 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유병로 대전산업대 교수·김광식(金光式)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두영(李斗英) 청주경실련 사무처장·주용기(朱鏞鎰)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영산강과 섬진강수계에서는 임낙평(林洛平)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주암호보전협의회 회장인 현 고(玄) 스님과 사무국장 조기안(曹基安)교수·목포환경운동연합의장인 서한태(徐漢泰)박사 등이 국난을 맞아 의연히 일어난 의병대장들처럼 죽어 가는 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환경부가 내어놓은 대책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지역 여론을 올바른 방향으로 몰아주는데 앞장섰다.

이들 지역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의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을 대

상으로 한 환경부의 끈질긴 대화에 힘입어 2000.10.24 국무총리주재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서 충북지사와 충남지사 그리고 대전광역시장과 전북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금강대책이 확정되고, 전북지사와 광주광역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영산강·섬진강대책이 정부대책으로 확정되기에 이르렀다.

다시 해가 바뀌어 2001. 3월에 들어서 곽결호 환경정책국장이 기획관리실장으로 승진하면서 그 자리에 이규용 국장이 보임되었다. 그리고 수질국장 자리에는 1999. 12월부터 수질정책과장으로서 치밀하고 책임감 있게 불철주야 실무를 맡았던 윤성규(尹成奎)과장이 수직승진한다. 업무에 임하는 자세의 성실함과 능력이 평가를 받았던 것이다.

임시국회 회기중인 2001.4.19 금강특별법안과 영산강·섬진강특별법안이 나란히 국회로 넘어갔다. 2000.6.23 국회로 넘어간 낙동강특별법안도 나중에 보내진 금강특별법과 영산강·섬진강특별법안과 함께 셋이 묶인 것이다. 그리고 이 세 개의 법안이 국회에 모두 제출되면 함께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영남지역 국회의원들의 언질도 받아놓은 터였기에, 환경부는 6월에 열릴 임시국회에서 3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으리라 굳게 믿고 있었다.

6.22 드디어 국회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개 법안에 대한 심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김성조위원이 경북지역의 요구사항인 3개 특별법간 규제 내용을 같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위 위원들간에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채 정회되고 말았다. 낙동강하류의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수계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한 경북지역의 반발이 걸림돌이 된 것이다.

당시 경북지역에서는 모두 10가지 요구사항을 내어놓았으나 정부는 물론 타수계 입장에서도 그것을 수용하기는 곤란했다. 그 요구사항은 오염총량관리제를 한강수계와 같이 임의제로 할 것, 하천인접지역에서 도시 또는 산업단지개발시 녹지 등 오염저감시설설치 의무화 규정을 삭제할 것, 공단마다 설치하게 되어 있는 완충저류시설을 삭제하거나 전액국고로 설치할 것, 축산분·뇨분리저장 의무화 규정을 삭제하거나 아니면 전국적

으로 적용할 것, 하천구역에서의 비료·농약의 오·남용제한 규정을 전국적으로 적용할 것 등이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부산지역으로 봐서는 엄연히 상수원지역인 낙동강 유역에는 수많은 공단이 산재해 있고 크고 작은 도시가 입지하고 있어 다른 수계와 달리 오염부하량이 매우 크다. 그런 한편으로 팔당호나 대청호유역에 이미 지정되어 있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같은 오염원 입지제한도 없는 것이 낙동강 수계이다. 또 소규모 공업단지나 시급 도시 하나 없는 주암호 상류와도 견줄 수 없이 수질관리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낙동강 수계이다.

이렇게 수계간에 오염원의 분포와 오염부하량이 크게 다르고 하천유량 조건도 판이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수계에 동일한 규제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대측으로는 수용하기 곤란한 것이었다. 결국 동일규제 주장은 국회의 법제정 과정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빚고 말았다.

일찍이 1997년 당시 환경부는 4대강 수질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전국 수계를 대상으로 단일법인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었다. 그러나 수계간 특성과 오염정도 등이 다르므로 전국법으로서는 효과적으로 수질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국회의원들, 특히 영남지역 의원들의 반대 때문에 법안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었다. 이런 뼈아픈 경험 때문에 환경부로서는 다시 전국 수계에 동일한 규제를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는데 대해 국회가 원망스러운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국회에서 3대강특별법안이 지역의 반발로 발목이 잡히게 되자, 법 제정을 주목하고 있던 언론과 시민환경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신문에서는 "3대강특별법 물 건너가나" "3대강특별법 발목잡기 안된다" "방치된 3대강특별법" "3대강특별법, 올해 넘기면 기약없다" 등의 제하의 사설을 연일 실었다. 그 동안 실패를 거듭한 물살리기 정책 끝에 현 정부 들어와 특단의 대책으로 수계별로 현지사정에 맞춰 물관리대책을 세우고 그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계별특별법이 정치논리 때문에 표류되어서는 안된다는 국회의 행태를 비판하는 것이 기초

를 이루었다. 2001.9월 들어서는 9. 18일 영산강수계 63개 시민사회단체가 영산강법 조기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9.21 금강수계 69개 시민사회단체와 8개 지방자치단체가 금강법 조기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10.22에는 전국의 172개 시민사회단체 등이 3대강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그 대표단이 한나라당사를 방문, 항의하기도 하였다.

배수진을 친 환경부, 필사적으로 나선 환경부장관

환경부가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정성을 쏟아온 3대강특별법은 이렇게 표류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2년은 6월에 지방선거가 있고 12월에는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한다. 3대강법이 2001년이 가기 전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해를 넘긴다면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이 지역주민들에게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되고, 그렇다면 법안심사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 분명했다.

대통령께서도 몇 차례에 걸쳐 환경부장관에게 3대강특별법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지, 또 그것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하문하시자 김장관의 어깨는 더 없이 무거울 수밖에 없었다.

본부, 지방청 할 것 없이 장관 이하 모든 직원들은 3대강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한 최후의 전방위 작전에 나섰다. 장관은 질게 낀 안개 때문에 뜨기 어렵다는 주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빠듯한 일정을 쪼개어 국립공원관리공단소속 헬기를 타고 2001.10.26 오지중의 오지인 경상북도 봉화읍으로 날아갔다. 거기서 개최된 『낙동강특별법제정관련 경북도민 대토론회 및 환경부장관과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소위 sanitary time도 없이 4시간 동안 200여명의 지역대표 및 주민들과 마음을 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현 수질보전국장은 물론 기획관리실장과 환경정책국장까지 3대(三代) 수질국장을 함께 2001.11.8 구미로 내려보내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을

극력 반대하면서 대규모 시위에 나선 구미 주민들을 만나 법안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한편 지역의 요구사항 중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수용토록 노력하는 정성을 기울였다.

11. 26에는 구미지역 대표들이 환경부장관과의 면담을 위해 장관실을 찾았다. 한쪽에는 장관과 차관, 기획관리실장과 환경정책국장, 수질보전국장이 앉고 맞은편에는 구미지역을 대표하는 최강성 인사 8명이 자리를 잡았다. 서로 마주보면서 앉자마자 시위때문에 머리를 밀어버린 나영철(羅榮澈) 구미해병전우회장은 "김장관을 직접 보니 TV에서 보는 것 보다 못하다"는 가시돋친 말로 나왔다. 김장관은 오염총량관리제가 결코 구미지역의 산업발전을 가로막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과 강 건너 불에서 발등의 불로 다가오고 있는 국제적인 환경규제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제도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나갔다.

시간이 지날수록 장관과 구미대표들간의 대화가 부드러워지기 시작하였다. 드디어 구미대표단을 이끌고 온 신광도(申光道) 구미 오염총량제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그간 여러번 중앙부처를 방문해 봤지만 이렇게 장관과 차관 그리고 부처의 주요간부가 모두 나와서 장시간 진지하게 토성의 있게 지역의 의견을 들어준 예는 없었다면서 낙동강법제정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표하기에 이르렀고, 예의 맨머리 나영철 대표는 "이제 다시 보니 김장관은 TV에서 보는 것 보다 훨씬 미인입니다."는 말로 쌓인 앙금이 풀렸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였다. 8명의 대표들은 낙동강법 제정에 이 시간 이후 반대하지 않겠다며 그 억센 손들로 큰 박수를 보냈다.

낙동강특별법안은 간신히 평형을 이룬 저울이다. 합의와 양보 속에 마련된 법안내용이 조금이라도 바뀌게 되면 저울의 균형이 깨지고 만다. 그리하여 상류와 하류, 지류와 본류, 농촌과 도시 중 어느 한쪽으로 기울게 되고, 그에 따라 어렵게 도출된 미묘한 균형은 무너지게 된다. 상류지역 요구를 들어주게 되면 하류지역이 들고일어난다. 따라서 상류지역의 요구사항 가운데 수용해야 하는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는 곧바로 하류지역으로 내려가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얻어야 했다. 혹시라도 상·하류 지역 언론에 새어나가 판이 깨질까봐 숨죽이며 다녔다. 그러고서야 경북 등 상류지역측에 수용결과를 알릴 수 있었다. 일은 이렇게 진행되었다.

마지막 단계에서의 최대 고비는 수변구역 지정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주암호 상류지역에서의 결판에 달려 있었다. 이 지역주민들은 그야말로 쌓인 한이 깊었다. 지금은 20여년전의 일이지만 당초 정부가 주암댐을 건설할 때 농업용과 공업용수 댐을 짓는다면, 댐에는 유람선이 뜨고 댐 주변지역은 관광지로 개발하여 살기 좋고 풍요로운 고장으로 만들어 주겠다 약속했다는 것이다. 그래 놓고는 어느날 갑자기 식수원으로 바뀌면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개발을 못하게 하더니, 이제는 수변구역으로 묶으려 한다면 결사반대 의지를 고집한 것이다. 아직도 어느 집에는 그 옛날 마련했던 유람선이 녹슨 채 남겨져 있다고도 했다.

구미대표단이 다녀간 11.26 그날 저녁, 김장관은 또다시 차관과 관련 실·국장들을 모두 대동하고 염영섭(廉永燮) 주암호 3개시·군 생존권대책 위원회위원장 등 5명의 주암댐 상류지역 주민대표들을 만난다. 김장관은 이들을 저녁식사장으로 초청하여 사나운 분위기를 부드럽게 한 후 대화를 시작하고, 이어서 과천시내에 위치한 호프호텔로 자리를 옮겼다. 그렇게 밤늦도록 수변구역지정 및 영산강·섬진강특별법 제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앞으로 건게 될 물이용부담금으로 재산상의 손실을 최대한 보전하는 한편 행자부, 건교부 등과 협의하여 특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전라남도와의 함께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위하여 주암댐 상류지역을 방문하여 주민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직접 설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동수(鄭東洙)차관은 이날 밤 이속하도록 협상 아닌 협상을 벌여 이들의 마음을 기어코 돌려놓느라 노심초사했고, 이튿날 아침까지도 장관은 주암 주민 대표들의 분노를 갈아 앗히느라 애를 써야 했다.

3대강법이 국회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다음날인 12. 1일, 김장관은 약속대로 주암호 방문에 나서고자 했으나 그 전날부터 지역 분위기가 험악하므로 장관이 내려오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상황보고가 접수되었다. 그럼에도 김장관은 주민들과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 주암호 지역행을 강행하였다. 전남 화순군 남면소재 사평초등학교에 운집한 500여명의 주민들과 계속된 토론회는 오전 10시부터 점심도 거른 채 3시간반 동안 계속되었다. 중간중간 험한 분위기가 이어졌으나 마지막에 헤어질 때 "오늘 대화는 대단히 유익했고 앞으로 제정될 하위규정에 지역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대통령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낙후지역을 우선 배려하는 환경부 장관이 되겠다. "라는 인사말로 토론회를 마무리하려 하자 주민들은 김장관에게 순수한 인정이 듬뿍 담긴 큰 박수를 보냈다. 고생 가운데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99년 6월부터 낙동강주민을 만나는 일을 100여 차례 계속하고 금강수계와 영산강수계 주민과의 대화 노력도 각각 40여 차례 계속하면서 결국 3대강특별법은 제정되었다. 험난한 바닷길 풍랑을 헤치며 선장 역할을 한 김장관은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던 날 이 모든 공을 다음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돌렸다.

"이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지역의 시민단체, 전문가, 언론 모든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특별히 주민을 비롯해서 그 지역의 대표되시는 분들께 그리고 지자체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필로그 ; 3대강특별법, 어떻게 제정 가능했을까

상하류지역간 첨예한 대립속에 표류되어 왔던 3대강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햇빛을 보게 된 원인(遠因)과 동인(動因)은 무엇일까. 민주화와 지방화의 물결이 온 나라를 덮고 있는 이때, 규제개혁의 목소리가 드높은 이때, 모든 이해집단이 자기 몫 챙기기에 한치의 양보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이때, 수많은 새로운 규제를 안고 있는 3대강특별법이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온 지역간의 동의와 합의 아래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던 그 사실적 배경은 무엇일까. 앞에서는 환경부로서 일해온 과정에 대해 간략히 기술했지만,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금수강산을 자랑하던 우리의 자연이 더 이상 버려지고 망가지도

록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성숙된 국민의식을 들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규제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는 상류지역 주민들조차 강을 살려야 한다는 명제에는 전혀 이의를 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상류지역에서 물 살리기에 나서지 않는 한 강물은 맑아질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이는 그간 개발 지상주의의 산물로서 빚어진 환경오염의 실상을 우리 국민 모두가 바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당장의 지역적 이해관계보다도 미래지향적인 환경사랑에 앞장서고 있는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결코 잊을 수 없다. 요컨대 대립과 갈등구조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발전시켜 상생(相生)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데 모두가 뜻을 같이 한 것이 문제해결의 원인(遠因)으로 작용한 것이다.

둘째, 과거 오염사고가 터질 때마다 대증적(對症的)으로 대처해 온 정부의 수질관리대책에서 벗어나 과학적, 체계적, 종합적 접근방식을 토대로 선진적인 물관리정책을 내어놓은 것이 국민적 지지를 얻었다고 본다. 즉 사후정화처리 중심에서 사전오염예방정책으로 전환하면서, 행정구역단위의 수질관리에서 유역단위물관리체제로 개편하고,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 관리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며, 불가항력적인 수질오염사고에도 대비하는 재난방지시스템을 갖추고, 유역공동체 구축을 위한 고통과 비용분담제도를 채택하는 등 획기적인 개선대책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진적제도들이 정밀한 오염원조사와 수질예측 모델링 결과에 따라 마련된 것 또한 전문가 그룹과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요인이라고 판단된다.

셋째, 언론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그룹과 문화예술계 등 여론주도층으로부터의 충정어린 격려와 건전한 비판이 상하류지역 주민들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순화하는 한편 정치권을 움직인 동인(動因)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아마도 국민의 정부 4년동안 특히 언론과 시민사회단체에서 한강을 포함한 4대강 수계의 물관리대책 만큼 애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 준 정부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다.

넷째,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환경부가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것이 역사에 남을 결실을 맺게 하였다고 본다. 즉 종래의 정부주도형 하향식 정책 수립 패턴에서 벗어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가 함께 때로는 다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견(異見)을 좁히기 위한 공식 비공식 접촉을 계속하면서 비록 더디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끊임 없는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결과적으로는 가장 빠른 합의를 도출한 것이다. 낙동강대책에서 법제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수렴과 지역간 이견조정을 위해 환경부가 전개한 활동이 기록된 것 만도 무려 200여회에 이르는 것은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달리했는가를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다섯째, 김명자 환경부장관의 장수(長壽)가 각계각층으로부터, 특히 3대 수계 모든 지역으로부터 고르게 신뢰와 지원을 얻게 된 든든한 배경이 되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환경부장관 자리에 2년반이란 세월은 결코 짧지 않다. 그러나 김장관에게는 그 세월이 자고 나면 흘러가 버리는 유수(流水)와 같았을지 모른다.

『국민의 정부, 최장수 장관』, 대한민국에서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만큼 김장관이 한 약속은 절대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을 3대강 수계 주민들에게 심어주었기 때문에 3대강특별법은 마침내 대한민국 법전에 오를 수 있게 된 것이다. 여기에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정통관료인 정동수차관이 부내 업무를 치밀하게 챙기면서 3대강법의 전도사로서 정부내 유관기관간 이견조율을 조용히 그리고 내실있게 해낸 점도 빼놓을 수 없다.

3대강특별법 제정은 이제 「새로운 먼 길」의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의 요구를 현명하게 수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멀고도 험한 산을 넘었는데 작은 봉우리쯤이야 왜 못 넘겠는가라는 자만을 하기엔 너무 이르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한다. 어려움은 있을 것이나 극복 못할 어려움은 아닐 것이라고.

환경부는 3대강법의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하여 3대강법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날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3대강법 시행추진단』을 설

치하고 그 밑에 유역관리제도팀(팀장:수질보전국장), 재정기술지원팀(팀장:상하수도국장), 행정지원팀(팀장:환경정책국장), 교육협력팀(팀장:공보관)등 4개팀과 지방청에 낙동강·금강·영산강대책팀(팀장:지방환경청장)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를 비롯해서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상세하게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 언론에 보도자료와 함께 설명했다. 본부에서는 환경부 장관이, 지방청에서는 청장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동시에 기자회견을 가졌고, 특히 지방언론에서 대단히 큰 비중으로 다루어졌다.

강물은 흘러야 한다.

길가던 나그네가 두손에 담아 타는 목을 축일 수 있는

그런 강물로 흘러야 한다.

그날을 맞이하기까지 우리 환경부는

아름다운 강 언덕에,

그 강이 흐를 수 있게 하는 크고 작은 산기슭에,

그리고 그 강과 산이 만나 이룬 넓은 들판에 샅터를 잡고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유역주민들과 함께

쉽 없이 해야 할 일을 다 할 것이다.